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4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3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소방청

상정된 안건

- 2023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소방청

(11시05분 개의)

○소위원장 위성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회 계연도 결산 심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결산 심사는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위법 부당하게 지출한 예산이 없었는지 정부의 재정 집행을 점검하는 국회의 주요 업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 심사가 가지는 의미를 감안하시어 각 부처가 시정할 사항과 제도개선을 해야 할 사항, 나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부처 건제순으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서면질의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별로는 먼저 개별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이어서 정부 측 입장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위원님 간의 토론이 끝나면 안건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라. 인사혁신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11시07분)

○소위원장 위성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입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안건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 시정요구 심사 시 참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84조제2항 2문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결특위에서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을 보내 왔습니다. 유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제도개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공무원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법령과 제도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실 수 있고

요. 여기에서 시정과 주의가 조금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시정은 그 강도가 좀 센 것 그리고 주의는 좀 미미한 것 그리고 시정과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수정이 가능한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주의는 향후 재발이 발생하지 않는 측면에 강조점을 둔다는 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청사항으로는 시정요구 1건당 1개의 시정요구 유형을 선택해서 의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및 제도개선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주의 또는 제도개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디지털정부혁신실입니다. 디지털정부혁신실의 경우에는 3개의 연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및 출연금 정산지연 개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추진과제 수가 37% 감소하고 대부분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58.5% 수준으로 예산 493억 원 중 203억 원을 이월하고 일부 사업 과제는 2024년에 비로소 사업 수행을 시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미비로 과제 수행을 중도에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사업 기간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례적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 따라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과제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연번 2번입니다. 5G정부망 이용지원사업 활용도 저조 및 운영관리 미흡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행안부는 5G정부망 실증사업 대상인 4개 기관의 이용료를 대신 납부하면서 통신사업자와 기기당 50GB 이상 사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평균 6.5GB 수준으로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분의 노트북, 5G모뎀 기기를 대상기관에 보급했으나 이 중 일부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통신망 이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별 실사용 수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서 불필요한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범도입기관의 이용률 제고 및 미사용 기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의 내내역사업인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사업은 기관 실수요 파악 미흡, 연도 중 정부 클라우드 전환 계획과 제도 변경으로 실집행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연차별로 클라우드 전환 물량이 재설정되고 전환계획이 순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하에 전환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안건에 대해서 저희는 의견 수용을 합니다. 현재 과제별 출연금 정산도 지적사항에 따라 완료를 했고요.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희망컨대는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2번 안건에 대해서 5G정부망 이용 관련해서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통신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해서도 제도개선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3번 노후장비 및 클라우드 관련해서 당시 23년도에 난이도 높은 신기술,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한 전략을 수정하면서 관련 내용이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클라우드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사항입니다.

○**이상식 위원** 두 번째, 5G정부망 이용지원사업 여기 3000대 중에 일부만 실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대 정도를 사용했다는 겁니까, 3000대 중에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마 외교부하고 과기부에서 사용량이 좀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에도 동일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이 예정돼 있나요?

○**이상식 위원**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되겠네.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장 이택길** 2930대입니다.

○**이상식 위원** 사용한 게요? 그러면 70대를 사용 안 한 겁니까?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장 이택길** 예.

○**이달희 위원**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우리 관서의 종이 사용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를 전 공무원에게 다 보급을 하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은 챗GPT를 사용해서 문서 작성 굉장히 쉽게 하면 업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텐데 그러면 ESG 행정의 경영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대면보고 들을 때 문서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만큼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G도 중요하지만 기기 보급을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 어떻게 개선해서 전 부서, 전국의 과장급 이상이라도 이걸 보급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종이 필요 없는, 그동안 진짜 수십 년 외쳐 오는 것 아닙니까? 종이 줄이고 전산망 생길 때부터 계속 체킹되던 건데 현장에 가 보면 사실 이렇게 수북이 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부터도 지금 책 만들어 돌리는 것도 전부 문서로 다 보내고 진정 종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질의 없으시면 유형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자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했는데요. 행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로 할까요, 제도

개선으로 할까요?

○이달희 위원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번, 5G정부망 이용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고 행안부는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달희 위원 이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모경종 위원 제도개선을……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요.

다음은 노후장비 통합·클라우드 전환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식 위원 이것도 제도개선 하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걸 이렇게 종합해서 토의를 하고 가니까 논의가 안 되니까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하나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배석자 중에 발언할 때는 직위와 성함을 분명히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뒤편에 담당 과장님들이 와 계시거든요. 국장이나 과장님들 와 계시니까 질의할 내용 있으면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페이지,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 주민참여 활성화지원 및 읍면동 기능 및 체계개선 사업은 실수요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수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신규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실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부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역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위원님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견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 문제는 과다 계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읍면동 기능 개선으로 당연히 원래 얘기했었던 30개 지역 그냥 하면 되는데 4개 지역만 한 것은 거의 일부러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주의 정도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30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왜 4개 지역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누가 가능한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 당시에 있던 조직이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이라고 하는 임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자연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위성곤** 질문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형 결정을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하자고 하는데 정부 측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3년 예산에 당초 계상되지 않은 국민대통합 김장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9억 74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반되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부적정한 집행 방식이라는 지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을 통한 신규 행사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견을 수용합니다. 향후에도 자원봉사 관련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정부 차원에서의 악의가 있었다. 선거를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했는데 사업 간에 유사성도 없었고 시급한 필요성도 없었고 필수적 경비의 충당도 아니었으므로 국가 재정법을 분명하게 전용한 부분이라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어제 장관님께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걸 정식으로 국비사업으로 하겠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내년도 국비 편성할 때 관련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자체와 함께 집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던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 방식이나 변경 과정에서도 상당히 부당하고 특히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측면이 명백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그날 김장 할 때 저도 경상북도에서 다 같이 김장을 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다 같이 했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전용해서 대통령…… 그때 전체가 화합,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다 같이, 짐장의 의미가 비비고 뭉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십시일반 내서 없는 사람들 챙겨 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되고 처음으로 코로나가 풀리고 마스크 벗고 하는 첫 겨울이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저도 앞으로 권고사항을,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행정부에. 각 지자체가 가면 모든 단체가 짐장이 다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하고 광주시장도 하고 다 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거기 가서, 올해 그렇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직접 하면 다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했나 이런 질책도 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죽 해 오던 그런 관행이 없어서 행정부가 갑자기 그런……

이건 선거를 앞두고는 아닌 것 같아요. 선거용이었다면 이런 당당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선거 전에 긴축재정을 엄청 지방정부에 조였던 걸로 봐서는 선거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 대화합과 또 사기 진작 그런 면이 많았던 걸로,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앞으로, 오히려 내년에 예산을 굳이 세우지 말고 지자체들하고 같이 해라 이렇게 하시고 한 부분은 주의로 좀 해 주시면…… 제가 현장에 같이 짐장 담갔던 그런 그 취지가 그때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선거에 대통령이 동원을 했다 이러시는데 그래서 주의를, 강력하게 주의를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달희 위원님도 이게 목적 외로 사용된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이달희 위원** 예.

○**김상욱 위원**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재정법 46조에 종합적 검토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 좀 유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이런 시정조치가 나가게 될 텐데 일단 이때 행사 자체가 자원봉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을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좀 무리가 되는 조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저도 주의 의견을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채현일 위원** 제가 사업추진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 여기 지적사항에도 국가재정법상의 전용 위반 그리고 사용금지원칙 해서 집행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무적인 어떤 오해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은 금년에 사업이 없다가 또 내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방식으로 사업추진방식은 안 된다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김상욱 위원** 저희가 그러면 시정으로 할 때 구체적으로 회수를 할지 사업추진방식 변경으로 할지 정확히……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시정이라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정이라는 게 보시면 징계나 변상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정하라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도개선은 행정이 한 것을 바꾸라는 것이고 주의라는 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정도의 의미라면 시정은 ‘그건 좀 지켜보기 어려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 이 행사 자체가 500만 원짜리 행사였고 거기에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도 충분히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국가재정법을 대체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위반하는 과정도 굉장히 악의적인 게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250개의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분명하게 내년 선거가 불을 보듯이, 정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게 무슨 행사인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당시에 각종 언론들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가 따라야지 이게 시정하거나 주의조치로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행사 저 역시 대체로 참가를 해 봤지요. 그런데 어느 때와 전혀 다른 이런 식의 무리한 것을 방조를 하면 국가가 나서서 계속 이런 행사를 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시정입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이달희 위원님, 징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달희 위원 그래서 징계가 아니고 저는 주의를 요청하는데요. 저희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또 오늘 결산에서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다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이 행안부를 대신해서 나와서 지금 인정할 부분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의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게 좀 더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의견이 많이 엇갈리니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전체 점검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8페이지, 연번 6번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후 모든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과제 내역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고 완료된 용역보고서의 42.9%만 공개해서 정책 연구를 공개토록 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약하는 기간보다 50% 이상 단축된 기간인 1~3개월 내에 용역이 완료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정 경쟁에 근거한 계약과 그 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근거 법령의 취지와 정책연구 공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것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연구결과가 국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결과물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뒤 국정에 미반영되었다면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부 부처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특수성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주로 특별위원회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0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연구용역을 하기에 계약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간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이 좀 많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계약 방식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결과에 있어서도 지금 거의 90% 이상 현재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연구용역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하고 또 국정에 미반영되었다면 차년도 예산편성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조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기본자료의 성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와 두 번째로는 결과물에 대해서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은 되겠지만 국정에 미반영되었던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의 편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두 부분을 나누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국민통합위원회가 이 성격 자체가 제가 지금 찾아 보니까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부서 같은데요. 그러면 더더욱 국민적인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예산 집행도 투명하게 했어야 되고 또 국민통합에 관련된 문제, 무슨 대외에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권 위원**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이성권 위원** 그 특수성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여기 운영하는 방식을 통상적인, 상시적인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주로 특별위원회, 미시적인 태스크포스처럼 주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결론을 내시는, 토론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십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10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도 절차대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소요가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 방식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과 해산까지 시간이 100일 정도의 활동 기간이라는 짧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365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이루어졌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올해부터는 개선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가도 이게 하나의 측면만 놓고 보면, 제가 조금…… 질문에 대한 제 개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완료된 용역보고서, 내용이 조금 충격적인데 42.9%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공개가 안 됐다는 건데 이건 왜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공개가 계속 안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부처 협의라든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최근에는 91%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최근에는 그렇게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 최근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금 7월 기준입니다.

○**이성권 위원** 7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42.9%에 해당되는 공개된 것 말고 나머지 공개 안 된 것까지 합산을 해서 그 정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 거 전체……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21건 중에 19건을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한.

○**이성권 위원** 21건 중에 19건도 했다. 그리고 또 시정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을 놓고 본다면 이건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상식 위원** 차관님, 이게 그러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산 집행을 하는데 행안부 어디에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사무국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사무국이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거기에 대통령 직속이라고 되어 가지고 위상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행정안전부의 예산 집행에 관련된 방침이나 이런 게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행안부 공직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파견 나가 있고 다른 부처에도 나가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아까 42.9%만 공개하다가 91%로 이렇게 늦게 공개한 이유가 뭔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하면 되지 늦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 또 관련 부처들 간에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정보위원회도 같이 겸임으로 하고 있는데 정보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기밀을 다

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된 용역들을 수행하면 공개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들을 용역을 주는 건데 이렇게 나온 것들은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와 관련된 건 아닌데 제도개선을 명확하게 내부 규정으로 해서 이걸 공개하도록, 그리고 방금 말씀한 것들 보면 용역 수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아까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 같은데 그 절차를 저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는데 전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도개선……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시정 유형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변상도 있고 정계도 있고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제도개선도 있는데 제도개선은 제일 낫은 단위고요.

그런데 저는 21건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왜 공개할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이걸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저는 정계 수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1건 중에 현재 19건 공개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건을 공개를, 저희가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해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왜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우리 사무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예.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성함까지 말씀해 주세요.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운영지원과장 박래운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 했을 때는 2024년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달은 대통령님께 성과보고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회 끝나고 난 후에 바로 다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42.9%가 맞고요. 대통령께 성과보고회 끝나고 난 뒤에는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91%……

○**이광희 위원** 두 건은 왜 안 했냐고.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두 건은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아직 내부검토가 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건만 지금 제외된 상태고 나머지는 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공개적으로 용역을 한 사항이고……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안에 내용상 어떤 개인의 의견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것 연구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것은 아니에요?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그게 용역보고서라는 게 용역을 발주할 때 발주 요건을 맞춰서

발주하고 검토해서 정부가 수용한 것은, 납품을 하려면 정부가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예.

○소위원장 위성곤 수용했다는 건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은 각자 개인의 의견인데?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안에 내용상 봤을 때 그게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그 어려운 판단을 왜 국민통합위원회가 하냐고요.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그게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을 때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그것 공개 안 하실 거예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아니요, 그게 내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해서 공개하는 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달희 위원 수의계약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예요? 그 연구자들이 아주 많은 주제도……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아, 그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이달희 위원 짧게, 3개월짜리가……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예, 그러니까 100일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한 과제를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게 100일입니다. 그 사이에 과제가 정해지고 그 과제를 추진하는데 그 사이에 이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국민통합위원회가 100일 동안만 존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아닙니다. 특위 과제가……

○이상식 위원 특위 과제가……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예, 특위 과제를 특위 과제별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고 특위를 별도로 만듭니다.

○이상식 위원 제도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이광희 위원 국민통합위원회 그 이름 자체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연구를 한 건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공개가 됐다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께 공개를 해 주시고요.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건도 개인정보만 지우고 그러고서 다 공개를 해 주세요.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제도개선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국정에 미반영되었다면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편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사항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페이지, 연번 7번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법정기한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정기한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미제출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사항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페이지, 연번 8번 균형발전지원국입니다.

한국섬진홍원의 출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출연금이 연초에 전액 교부되고 집행잔액이 반납 처리되지 않아 매년 인건비 잔액이 이월되고 섬진홍원 사업비의 실집행이 부진하여 출연금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출연금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등 관리를 강화할 것.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 출연금을 분할해서 지금 교부를 하고 있고 또 연말에는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저희가 미교부할 것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연말 되면 실집행률은 아마 95% 이상 올해는 달성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섬진홍원 이게 발족한 지 얼마 안 됐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한 삼사 년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상식 위원** 아직 내부 그게 없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도개선으로……」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과정의 제약 등에 따른 실집행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가능성, 지자체의 기존 사업 집행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 사업을 선정·계획하고 이월액이 과다한 사업은 연부 액을 조정하는 등 연례적 이월 과다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시정요구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도개선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연번 10번, 1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행안부는 2023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30개 시군에 국고보조금 2164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1017억 7600만 원을 집행해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3년도 위탁사업의 실집행률은 31.6%로 사업 추진 현황에 비해 과도한 위탁금이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탁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의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잠깐만. 주의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 정도가 타당하다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왜 그러냐면 이런 위탁사업이 집행률이 늦어지는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서 담아 두면 다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잠깐만, 질문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제일 많은데 집행률이 9%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마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사전적인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토지계획이라든지 수용, 여러 가지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

발사업이다 보니 전형적인 집행 부진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개발사업인 경우 일반적으로 민원들이 걸려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집행률이 늦어지는데요.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

○**이광희 위원** 그런데 차관님께서 주의를 하자고 그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주의 의견으로 통일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광희 위원** 혹시 차관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뭔가 응분의……

(웃음소리)

아니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통일적으로 주의 의견을 주셔서 수용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연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은 매년 1조 원씩 기금으로 출연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고 있으나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금의 실집행률은 37.8%로 저조하고 23년 말 기준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도 존재해서 사업의 집행 점검·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에 대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지자체에 대하여 사업 선정·예산 교부 단계에서 폐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점검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금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견 주신 대로 제도개선 의견으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집행이 부진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개선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도개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보태면 지금 폐널티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 놓기는 했지만 인센티브 방안도 분명히 동시에 강구가 돼야 됩니다. 잘하는 곳을 더 잘 지원해 주고 복돋아 주는 방식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여기에 그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제나 요건 이런 게 너무 엄격한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정말 많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체적인 계획은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늦었던 것은 저희가 22년 9월부터 하다 보니 행정적인 사전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절차가 늦어져서 초기 상황은 조금 집행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달희 위원**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좀 더 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연번 12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소멸대응기금의 기초지원계정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역 특색이나 기금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 분야에 편중되거나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 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차별화해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형의 상향식 사업을 추구하고 기존 분산적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나 국가보조사업들과 유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돼서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액 중 95% 이상이 비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여 역내 시군구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문화·관광 분야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차별화되어 추진되도록 하고 광역지원계정 재원이 역내 시군구에 재분배하는 형태로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이나 동일 생활권 공용시설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8페이지, 연번 13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2년도 기금액은 당해연도 9월에 배분돼서 기초지원계정의 실집행률은 인구감소지역 5.7%, 관심지역 0.4%에 불과하며, 23년도에는 연초에 기금액이 모두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19.3%, 관심지역 22.2%로 부진합니다. 한편 지자체에서 22년 배분액 중 23년 말 기준 집행하지 못한 잔여사업비는 해당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기초지원계정의 실집행 부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잔여사업비가 해당 사업으로 재편성돼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2022년도 사업이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조금 지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위성곤 올해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올해, 22년도분은 거의 상당 부분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23년분, 24년분도 있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조금조금씩 지연이 되고는 있는데요. 속도는 높여 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신가요?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강경국 균형발전제도과의 팀장입니다.

22년도 사업의 경우에 현재……

○소위원장 위성곤 좀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안 들려서.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강경국 예.

22년도 사업의 경우 현재 60% 내외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자체 예상 목표를 점검한 결과 22년도 같은 경우는 연말에 90%까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3년도나 24년도 사업이 이전 것과 좀 연계가 되어서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에는 대부분 사업들이 착공하기 때문에 착공이 시작되면 집행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것 이해가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사업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면 그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 말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강경국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상에서 이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월을 다 못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업에 쓰도록 저희가 배분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동일한 사업에 재편성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 놨고……

○이광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다른 사업으로 지금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열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 아니세요?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강경국 아닙니다. 한 번 이 사업에 쓰겠다고 배정된 금액은 다시 동일한 사업에 신청하도록……

○소위원장 위성곤 사업 기한이 너무 단기적으로 설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 사업인데 1년 단위로 설정돼 있어서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것 아니에요? 이게 2~3년 단위로 장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강경국 예, 맞습니다. 지역에서는 좀 더 여유 있게 그걸 잡아서 편성해야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좀 단기간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한 면이 있어서 지금 이월 문제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한 거고 저희가 지금부터는 예상되는 기간이라든가 사전 행정절차를 미리 다 정리하고서 편성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차관님, 이게 사전 준비가 되어진 곳에 우선적으로 하게 하고 기한을 단기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14번까지만…… 제가 잠깐 나가야 돼서요. 14번까지만 하고 오전에 쉬고 2시에

다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잠깐만 좀……

○**소위원장 위성곤** 예.

○**채현일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현행 1조 원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매년 1조 원입니다.

(위성곤 소위원장, 이광희 위원과 사회교대)

○**채현일 위원** 매년 1조 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네 가지 안건 보니까 계속 집행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집행 방식이나 운용 계획이나…… 또 지방소멸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분권 차원에서 가장 큰 이슈잖아요. 행안부 차원에서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대리 이광희** 차관님,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연변 14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과 빅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지원계정 사업은 투자계획과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배분하는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서 기금의 취지를 반영한 대규모, 중장기 사업이 연단위 성과 평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재원조달계획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투자계획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도별 추진실적에 근거한 평가와 차등배분으로 지자체가 단기 실적 도출에 유리한 사업에 투자할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이광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번, 사업지원 및 성과평가체계 개선 필요도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심사가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 위성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안부차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연번 15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5번 사업입니다.

부처지역사업 연계지원 사업은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별 자치 기구의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을 두고 있으나 매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효과적인 추진체계와 사업방식을 재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시정요구 의견에 수용합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적사항입니다. 23년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275억 1100만 원으로 옥외광고센터가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그 수입 및 지출에 대해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입세출예산 편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옥외광고수익금의 기금화 등을 통해 국가재정으로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수익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시정요구사항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합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현일 위원 잠깐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나요?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전에 옥외광고 수입을 국가재정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말씀이 여러 번 있으셨고요. 특히 기금 쪽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기재부 등과 계속 협의를 했고 연구용역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 협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 채현일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실천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이번만은 체계적으로 강도 높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협의 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기금 편입과 관련되어서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당시 논의됐던 것은 이게 기금수입이라고 하는 게 옥외광고물 수입하고 옥외광고물을 쓰는 내용하고 지금 일치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행사에 쓴다든지 지자체 쪽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법에 있는 법체계랑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그동안 있었고요. 그래서 법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 하는데요. 내년 3월까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뭐 용역을 하든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상임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다음, 17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적사항입니다. 2023년에 기업이전 관련 설문조사와 컨설팅 용역을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검토하여 본사업 추진을 고려한다는 계획하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효과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 없이 24년도부터 본사업을 확대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이전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민간기업 입장에서 유인·제약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며 실제 추진 내역상 타 부처의 기업 대상 이전 촉진 사업이나 부처 내 지역 투자유치역량 제고 사업들과의 차별성 확보가 미흡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사업 지역으로 시범사업의 성과 검토 없이 본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 및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방향성을 결정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기업이전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사업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향후에 지방정부에게, 감소지역에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위원장님. 참고로 인구감소지역 특례법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연번 18번, 2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최근 매출액 변화, 지원 대비 효과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연례적으로 세목 조정을 통해 쇼핑몰 판촉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1770개 마을기업 중 1%에 해당하는 일부 기업만 선별 지원된다는 점, 행사 참여 업체가 모두 영농법인들로 농식품 소비정책사업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효과성 검토 없이 연례적 세목 조정을 통해 계획하지 않은 판촉행사용역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을기업 중 일부에 대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품 할인행사보다는 보다 많은 마을기업이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을 모색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시정요구사항 저희 의견은, 일단 이게 저희가 쇼핑몰 판촉행사 등에 관련된 예산의 사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정요구는 있습니다만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부처에서는 주의, 제도개선을 요청했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방금 쇼핑몰 판촉이나 이런 부분 온라인 판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우체국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우체국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우체국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경종 위원 기본적으로 우체국 자체보다도 더 다양한 방안까지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사기업을 배제시킬 필요 없이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데 주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저는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으로 하자는 의견이셔서 제도개선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연번 19번입니다.

30년까지 3500개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정부는 23년 말 기준 3500개 대비 2386개의 마을기업을 지정했습니다. 다만 지정취소 기업이 2023년 말 기준 586개에 달해 전체 5곳 중 1곳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 0원인 기업의 수도 18년에 199곳, 21년 449곳, 23년에 526곳에 달하는 등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과 고용 없이 간판만 걸고 있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마을기업 비중이 갈수록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운영 지표가 부실한 마을기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개선방안과 이와 연계한 차등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채현일 위원** 이게 역대 국정감사 이후로 매번 행안위에서 지적됐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마을기업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 관광 자원 그런 성격의 것도 있고 또 지역자원을 활용한 봉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우 다양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지는 않고요. 어쨌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폐업률 25% 정도면 다른 일반사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이 사업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보니 좀 수익력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구매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적사항입니다. 안산시와 포항시의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지원 사업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23년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실집행은 이월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두 지역의 공동체 복합시설이 갖는 의의를 감안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시설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관련된 행정 절차들이 모두 다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동체의 취지를 살려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바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점인데 이게 저희 부산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 이 두 개 지역의 실질적인 불용이나 집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안산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공동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었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 지진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도 사전 이행사항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올해는 다 마무리가 돼서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소위원장 위성곤** 지금 2024년 현재 안산은 몇 퍼센트고 포항은 몇 퍼센트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사업이?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소위원장 위성곤** 예.

○**행정안전부지역청년정책과장 김종철** 위원장님, 지역청년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현재 안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24억 71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당초에는 기본계획, 실시계획하고 착공까지 22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반영을 하느라고 좀 늦어졌고요. 올해 착공이 8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예산 19억 9600만 원이 올해 전액 다 집행될 예정이고요. 이게 되고 나면 26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포항은요?

○**행정안전부지역청년정책과장 김종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실시계획이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금 국비가 총 7억 지원이 됐는데 그게 다 소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착공은 내년 6월 달에 집행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도개선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1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경우 금고은행 계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금고은행 외의 금융기관 계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조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까지 금고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주시면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질의 없으십니까?

○이광희 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행안부 산하기관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21번, 22번, 23번, 24번까지 이것 말고도 또 지역에서 있어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이런 식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이 상태로 가는 것 자체가 매우 부실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하는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어 보여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심지어는 이번에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그것도 여기서 하는데 거의 지역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여기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이렇게 계속 매년 이런 식으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이런 식이면 뭔가 대안이 필요합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위의 21번 74억 이런 식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게 730억입니다.

○이광희 위원 730억.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굳이 21번뿐만 아니라 22번, 23번, 24번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아마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적 제약 요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외의 사람이 500만 원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광희 위원 그래서가 아니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홈페이지 만들어 주고 구축 사업 한 모든 것이 다 별로 이렇게 지역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 보셨어요? 그거 말고도 여기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전산시스템 구축한 게 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완벽한, 퍼펙트하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근본적인 문제 개선…… 차라리 이럴 거면 여기서 나오는 행사 다 외부로 돌려서 개별 사업자들이 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지역정보개발원의 사업 형태나 사업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게 주민 수용성이나 행정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진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차관께서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향후에 필요하시면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불러서 직접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상임위 때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행감 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시정을 요청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상반기까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번.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적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의무공시 대상 자료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공개 중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통합공시시스템은 지방공공기관의 재정공시 자료를 통합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제공 중인 자료가 전전년도 연말 기준으로서 시의성상 한계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공 자료를 확대하고 자료의 시의성을 확보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법령상 공시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주의로 저는……

○**소위원장 위성곤**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하자고 하십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주의로 하겠습니다.

이게 보탬e에 대한 점검을 좀…… 지방정부나 이용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파악해서 그 대안을 함께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제도개선 내용에 함께 담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연번 23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2년부터 서울특별시 지방세입시스템과 표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정보개발원에 민간위탁사업비 48억 7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빨주한 용역이 유찰되고 서울시와 사업 범위에 대한 협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22년 지급된 3단계 사업비 48억 7000만 원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와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조속히 빨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주의 정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냥 질문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권 위원** 저도 주의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찰이 됐다고 했는데 유찰 원인은 뭐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계약단가가 업체에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몇 번 유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의 사례를 보면.

○**이성권 위원** 단가 조정이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 조직 단가가 기준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자체를 조정하는 노력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이성권 위원** 그러면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계속 유찰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올해 안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건은 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집행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랑도 잘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성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주의.

○소위원장 위성곤 예, 주의 정도 하고요.

그 주문 사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 면밀한 협의하에 이택스 통합에 대한 사업 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하고 장기간 잔류되어 있는 위탁사업비는 회수, 정비된 사업의 소요에 근거하여 지방비 정산 및 위탁기관 재교부할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잠깐 제가……

제가 정확히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수보다는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환수는 빼고 취지를 반영해서 진행하는 걸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번.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적사항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23년 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시범운영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24년 2월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23년 2월 이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으로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개통 후에도 오류가 다수 발생해서 지방세 관련 민원만 57만 건이 제기되는 등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지역정보개발원의 23회계연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비 실집행 내역이 적정하였는지 검토하고 향후 지방세 등 납부 과정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적처럼 올 초에 초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있던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굉장히, 한 2000만 건 이상 징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현재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보다는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초기에 아마 시스템 구축하고 난 다음에 시범운영하는 기간이 있었겠지만 초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 이상식 위원 57만 건이면 민원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요?

○ 이성권 위원 전체 개수에서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요?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허락해 주신다면 단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 단장 하종목입니다.

민원이 다소 많아 보일 수 있는데요. 주로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새로운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되게 많았고요.

○ 이상식 위원 아, 시민들의 민원이 아니고요?

○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시민들의 민원은 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이 응대를 했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 응대한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은 지방에서……

○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문의한 건수가 그제 57만 건이나 됐다 이 말이에요? 지방공무원들이 몇 명인데요, 그러면?

○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누적된 개수가……

○ 행정안전부지방세입정보과장 윤희정 지방세입정보과장 윤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의 57만 건은 110 정부통합콜센터 같은 데 온 전화까지 다 포함한 수치이고요. 지자체 공무원들께서 저희한테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의한 사항은 지금까지 누적해서 20만 건 정도로……

○ 이상식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지방세를 어떻게 납부하느냐는 그 직접적인 민원이 아니고 운용 절차나 이런 데에 관한 민원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주로?

○ 행정안전부지방세입정보과장 윤희정 주로 시스템 사용 방법이라든지 편의 기능에 대한 문의사항이 다수였습니다.

○ 이광희 위원 여기 월별 민원 건수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올해 24년 2월 개통이 됐고요. 그렇지요? 올해 2월.

○ 행정안전부지방세입정보과장 윤희정 예, 맞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2월·3월·4월·5월·6월·7월·8월까지 7개월 동안 이게 57만 건이 된 거잖아요.

○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예, 자료……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보여서…… 7개월 동안 이게 월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런데 컴퓨터, 그것도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이 이 정도 오류를 낼 정도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월별로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므로 단순하게 제도개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그래도 뭔가 최소한 시정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월별로 이걸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식 위원 지방세입시스템 이것 공개 입찰한 것 맞지요?

○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위탁기관은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고요.

○이광희 위원 한국지역개발원에서 대부분 합니다. 여기서 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이 이 모양이에요.

○소위원장 위성곤 제가 받은 자료로는 위탁기관이 운영비를 협약 변경 없이 임의대로 조정하여 집행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거기 표현돼 있는 그 말은요 저희가 23년도, 작년에 오픈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픈을 못 하고 1년 딜레이 돼 가지고 금년도 2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받아 놓은 예산이 차세대시스템 운영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개통을 못 하는 바람에 차세대 운영 예산을 가지고—지금은 구세대가 됐지요—구세대 시스템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표현이 임의대로 썼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협약 변경을 해 가지고, 지자체 분담금에 대한 지자체 협약을 변경해서……

○소위원장 위성곤 협약 변경을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예, 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월평균 건수의 148% 이상 증가했다고 해서 다른 민원을 처리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2월 달과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창기 개통할 때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폭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했고 저희가 그걸 응대하면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월 달부터는 정기분에 들어가면서 시스템이 상당히 안정화됐고 지금까지는 안정화돼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게……

○소위원장 위성곤 월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전체 건수의 퍼센티지로?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추세가 하향이……

○소위원장 위성곤 추세가……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예, 하향세는 분명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도 1~2만 건씩 발생을 하고 있으면 하향세를 한다고 해도 그게 적은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이 정도면 다른 민원은 다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아마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민원이……

○이광희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로도 다 올 텐데, 전화가.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처리하는 민원 숫자가 많이 있고요. 지금 정기분이 8월 달까지 정상적으로 처리됐고 9월 달 재산세까지 처리되고 12월 달에 자동차세 2기분이 또 남아 있기는 한데 한 바퀴 돌면 시스템이 상당 부분 안정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내년에

가면 보다 더 안정화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정도를 하려면 구축을 하는 시간이나, 그것도 1년이나 더 늦춰서 시작을 하게 됐고 시간을 더 줬고 이게 처음 의뢰가 됐을 때부터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뭔가 굉장히 잘못돼 있는 그 상황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시정 정도를 해야 다시 이런 식의 실수를 하지 않지 않을까. 마음 같아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 정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게…… 57만 건이라는 게 엄청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원장 위성곤** 이광희 위원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시정 정도로 해서, 이것은 행정부에 이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라는 의미로 시정으로 의결을 하지요.

○**이성권 위원** 시정으로 가기에는…… 제가 시정요구 유형이나 이런 걸 그냥 한번 다시 들여다봤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이나 회수, 원상복구 이런 걸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요구하는 수준을 보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올리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두 분이서……

○**이성권 위원** 가위바위보 하실까요?

○**이광희 위원** 주의로 하시지요, 주의로.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어떻든 간에 마음은 시정을 담아서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0페이지, 연번 25번입니다.

지방교부세 미교부 및 미교부 규모 임의 결정 재발 방지 필요입니다.

23년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정부는 지방교부세 예산 중 8.2조 원을 미교부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23년과 같이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결정하는 집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이 발생한 것은 국세와 정률로 연동되어 있는 교부세의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 당국에서 교부세 자금 보류가 일어남에 따라서 그 관련 사실들을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진행됐던 사항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조치를 안 했더라면 사실은 내년도에 굉장히 큰 충격이 발생을하게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치를 했다면,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면 23년도에 만약 그대로 교부가 됐다면 75조 정도 됩니다만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내년도에 58조로, 굉장히 많은 충격이 지자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배정을 통해 가지고 그 위험을 분산했다는 말씀도 한번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옛날에 2013년도에도 사례를 보니까 교부금 미배정 문제가 재발돼 가지고 그때 시정조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때도 세수결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를 전액 교부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러한 50조~60조가량의 아주 큰 금액의 세수결손이 났다고 해서……

주무 부처가 기재부가 아니라 행안부잖아요. 지방재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교부금을 거의 10조 원 가까이를 이렇게, 그것도 그때 보니까 공문이나 이런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전체회의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강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정조치 정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이게 처음에 10.2조 원 규모로 지역에는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11월인가요 그 즈음에 3조 원을 지방교부세로 그냥 내려보낸 그런 건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이광희 위원** 어저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교부세 규모를 임의로 결정을 하고 그런 집행행위가 함부로 일어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게 지방자치단체마다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급한 불을 끄려고 3조 정도 투입해 가지고 선거 앞두고 무마하기 위해서 줬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게 설사 기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방교부세법에 위배되는 문제이므로 그런 의혹은 차치하고 그래도 이와 관련돼서는 감사원의 감사 요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2013년도 사례를 예를 들었을 때도, 그래야 2013년도의 사례를 다시 복기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권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궁금한 거 물어봐 가면서 하나씩 저도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라는 게 재원이 되는 게 딱 정해져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내국세의 19.24%입니다.

○**이성권 위원** 그리고 가장 큰 덩치를 차지하는 게 내국세 수입의 19.24%인데, 그때 세수결손이 얼마나 됐지요, 전체?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54조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성권 위원** 54조,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세금이 덜 걷혀 가지고 줄 수 있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 금액만큼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디서 빼 줘야 됩니까? 빼 줄 수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연동돼 있기 때문에요, 어떤 배정을 보류하든지 아니면 차후적으로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이성권 위원** 자, 그러면 현행법을 위반한 게 있느냐를 한번 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제정책을 잘 펼쳤나, 세금 들어오도록 잘했나 이런 평가들은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수 수입이 감소해서 정률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만일에 줄어든다 하면 그 줄어들 때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고 책임지는 당국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어떤 법을 적용을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자금 배정 보류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관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금 관리법, 자금과 관련돼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이 전체적인 재정수지에 따라서 배정된 예산 집행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이성권 위원**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작년 12월 31일까지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을 했거든요. 이게 지방광역단체나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수 재추계를 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부단체장들, 경제 부서의 부단체장을 다 불러 가지고 이 사항을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거라는 것을 기재부가 양해를 구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제 옆에 같이 있는 행정부시장의 경우는 행안부에서 요청을 해서 행정부시장들을 불러 가지고 이 사항을 설명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제가 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이성권 위원** 그러면 법령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한 게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가장 이해관계가 걸린 지자체, 그러니까 광역단체부단체장을 불러서 재정당국과 행안부가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쳤고 그러면 이러한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행안위가 조치를 내리려면 지방교부세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교부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게 돼 있고요, 다음 연도까지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에 명시돼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차차기년도에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이성권 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위배된 것은 없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무슨 국고가 상당히 횡령이 일어

나거나 어딘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면 감사원이라는,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가진 곳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제도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는 조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행안위에서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주의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다른 안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때 적용되는 부당한 부분과 관련돼서 아니면 법령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가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조치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성권 위원님 말씀까지 듣고요. 지금 이제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속개 시간은 회의 끝나는 대로 와서 회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속개가 되면 다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 중지)

(소위원장에게 확인한 회의 내용)

(16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위성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께서 법안소위에 배석해 있는 관계로 소방청 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소방청 이영팔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자로 소방청 차장에 임명된 이영팔입니다.

저희 소방에 많은 관심으로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위에 상정된 소방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소방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료비 지원금 미지급 문제 재발 방지 및 지역 간 지원 편차 완화 필요입니다.

2023년 예산 부족으로 325건 1823만 3760원의 진료비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부산, 울산 등 시도 소방본부 간 지원편차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향후 진료비 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소방본부 간 지원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시정요구 주신 제도개선에 대해서 소방청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도개선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기영** 다음, 국립 소방병원 건립 사업 일정의 철저한 관리 필요입니다.

동 사업을 시작한 2020년 이후 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대규모 예산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개원 목표가 2023년 12월이었으나 사업일정이 지연되면서 소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기가 202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방병원 개원 시기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시정요구 주신 내용을 수용합니다. 소방병원 개원 시기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의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기영**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충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은 2023년에 소방병원 부단장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없어 현재까지 충원하지 못하였고 소방병원 개원까지 48명의 의료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나 비수도권 지자체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방병원 의료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개원 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의료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소방청은 시정요구하신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도개선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다음은 산불전문진화차 적기 도입 필요입니다.

산불전문진화차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은 각각 50%인데 2023년 말 기준 계획된 수량의

약 51%인 24대만 도입되는 등 사업지연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동 사업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산불전문진화차가 조속히 화재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계약절차 추진, 납품 등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지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소방청은 시정요구하신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기영 5페이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필요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신규데이터 등록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위험정보 중개 서비스의 경우 재난의 발생과 피해 규모에 따라 아이콘이 구별되지 않아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플랫폼의 성과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 증가를 포함한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소방청차장 이영팔 소방청은 시정요구하신 제도개선 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도개선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기영 국립 소방박물관 건립공사 추가지연 방지 필요입니다.

동 사업은 지장물 보상 문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2023년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방청은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1단계 공사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1억 6000만원의 추가 실시설계비를 세목 조정하여 2023년 9월 1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12월 29일에 공사 및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공사 기간 부족으로 102억 56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시23분 기록개시)

또한 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저조한 점입니다.

소방박물관 예정 부지의 토지보상은 소방청이, 지장물 처리와 영업 손실 보상은 광명시가 담당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광명시가 보상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광명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부지 매입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단계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시정요구 주신 주의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부언으로 보고를 더 드리자면, 현 주유소 부지는 광명시와 우리 소방 그다음에는 주유소 당사자끼리 협의를 다 마친 상태로서 9월 말 되게 되면 아마 주유소가 철거되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7번 사업 담당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소방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사업은 소방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 담당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 통제하지 못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정보통신망의 2개 회선 중 1개 회선만 23년도 내에 운영되었고 다른 1개 회선은 사업 담당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우선협상자 지위를 둘러싼 가처분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연도 내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소방청은 외부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야 직위해제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착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비위 의혹이 있는 사업담당자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소송의 대리자로 지정하였고 데이터망 구축 완료 전에 완료 보고를 먼저 하는 등 법령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2023년 행안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방청은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절차를 강화하고 유사 사업 추진 시 업무 담당자의 비위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소방청 의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의 후반부에 보면 데이터 구축 완료 전에 완료 보고를 먼저 하는 등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데이터 구축 완료 보고가 아니고,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기 전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설치한 것을 보고한 사항들을 완료 보고라고 일단은 표현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장비 설치 완료 보고의 취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이 장비를 설치하고 난 뒤에 데이터망 구축 완료에 대한 추후의 검사보고서는 두 달 후에, 2023년, 작년 10월 27일에 보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소방청에서는 사전 통제와 관리 감독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괜찮으시다면 저희들은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주실 것을 감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까, 이 사건으로?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고요. 경찰 조사를 넘어가서 지금 검찰에서 이 비위 사실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중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 문제가?

○**소방청차장 이영팔** 사안이나 이런 사항들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엄중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그것에 맞춰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이 한 사람의 일탈이나 그런 걸로 치부하기에는, 기준의 소방청 조직의 어떤 체계가 있고 그 관련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광희 위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현재는 이 사안이 발현된 이후에 저희 소방청 자체에서는 일단 이 비위와 관련한 사항들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청렴과 관련한 사항들의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행위가 발생된 계약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들에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사안이 발생되게 되면 지정계약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해서 다수자들이 참여를 하여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련을 하여서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성권 위원** 2023년에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안이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계약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의조치로 했으면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주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8번입니다.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추가 지연 방지 필요입니다.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은 선박 화재 대응을 위하여 부산과 울산에 국가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고 소방선박 2대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소방선박 도입 사업은 소방선박 설계·건조·인도 등 전반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고 국가항만 소방정대 신축 사업도 당초 계획 대비 1년가량 늦어진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방청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 소방청에서는 주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 전문위원 서기영 9번 면밀한 장비구입 계획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사업은 특수 차량 및 장비, 개인휴대안전장비 등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소방청은 충주119화학구조센터에 무인파괴방수차를 도입하였는데 차량 및 장비 구매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무인파괴방수차 도입은 2022년과 2023년 2개년도 사업이며 총 구매예산이 15억인데 2022년에 차량구매비 지출을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많이 하였음에도 2023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2023년도 예산 8억 1900만 원 중 1억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구입한 차량에 무전기, 영상송출장치 등이 장착되어 있어 별도의 운용 장비가 불필요하여 2023년 무전기 등 구입예산 2억 2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불필요한 장비구입 계획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이며, 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청차장 이영팔 향후 장비와 관련 예산편성 시 차량 사양, 부속 장비가 뭐가 있는지 등 면밀히 살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의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꼼꼼히 잘챙겨서 해야 되겠어요.

○ 소방청차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전문위원 서기영 10번 사전절차 및 관련 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지원 방지 필요입니다.

훈련장 건립사업은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특수구조대 내 유형별 지진대비대응훈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비축기지 건립사업은 권역별 특수구조대 내 대형 지진 시 대응을 위한 비축장비를 보관하는 기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훈련장 건립사업 중 충청·강원대 훈련장 건립사업은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미비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었고 비축기지 건립사업 중 충청·강원대 비축기지 건립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누락과 더불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아 BF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등 이를 보완하느라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소방청은 추후 유사 사업 시행 시 사전절차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향후에 저희들 소방청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인허가 절차상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11번 중앙소방학교 수입대체경비의 수입·지출 비목 연계성 재정비 필요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수행함에 따른 위탁 훈련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징수하는 수입대체경비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앙소방학교 청사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소방청은 징수한 수입대체경비의 일부를 청사시설관리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청사시설관리 경비는 교육생 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비이므로 직접적으로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사용해야 하는 수입대체경비를 청사관리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2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방청은 수입지출 산정 비목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향후 청사시설관리 경비를 중앙소방학교 운영 사업으로 조속히 이관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제안되었고 둘째,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위탁교육훈련비용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으로 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 소방청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리용역비 등 청사관리 비용을 교육비로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운영사업비로 편성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두 번째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위탁교육훈련비용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에 대해서는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확인만 할게요. 아까 청사관리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현이 잘못…… 죄송합니다.

○**이성권 위원** 저도 듣기로는 '부적절하지 않다'고 들렸거든요. 그렇게 말씀한 것은 맞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죄송합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권 위원** 아주 깨끗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위탁교육훈련비용 단가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전년도에 비교하면, 소방관이 한 6주 교육을 받는데 일인당 보통 한 250만 원 정도를 내고 중앙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지자체 공무원들이 와서 연수를 받는 거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지방소방공무원들이 중앙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용으로 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순수 교육비가 약 한 반, 정확히 말하면 한 60% 정도가 교육비가 아닌 교육 장소의 청사관리 비용으로 지금은 충당해 오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소위원장 위성곤 아, 그래요?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이, 250만 원을 내면 60%가 그 비용이라는 거지요, 실제 강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40% 정도인데?

이 60% 정도는 정부가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내막을 좀 말씀드리면 천안소방학교라고 아주 노후된 소방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유지 관리 비용이, 그간에 사실은 많이 노후됐는데 유지 관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교육 장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받지를 못해서, 교육을 하려면 그 시설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니까 예산 부분은 없고 그래서 부득이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비와 그다음에 시설운영비를 같이 합해서 수입대체경비로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저희들이 작년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올해는 이제는 교육생은 순수하게 교육비만 내고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중앙학교에서, 정부에서 다시 지출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2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교육비로 40%만 내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지금 책정으로는 전년도 준하게 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전년도 준하게 되면?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이상으로 지적……

○소위원장 위성곤 잠깐만.

이 사항은 주의로 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제도개선을 저는……

○소위원장 위성곤 예?

○이성권 위원 제도개선으로……

○소방청차장 이영팔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주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 제도개선으로?

○이성권 위원 이미 개선조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예,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뒤에 보시면 부대의견 1건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부대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수료 수입 적정성 검토 필요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제품검사를 수행하며 소방용품 검사, 위험물 검사 등을 통한 자체수입은 2023년도에 639억 5300만 원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금융자산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수수료 수익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2020년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기관의 이익증가분을 사내 유보함에 따라 금융상품 및 이자수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소방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금융자산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기관 수취 수수료 수익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한 사례는 수수료가 요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 아니고 소방법령이 변경되게 되면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신규 소방시설 설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속품들에 대한 어떤 검사,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수량이 증가됐습니다. 수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수수료하고 이런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꽤 늘어났다라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2년도에 비하게 되면 검·인증 신청 물량이 약 한 13%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증가한 부분, 수수료도 물론 약간은 증가했지만 대부분 다 이익의 증가 원인이 수량의 많음에 따라서 증가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건물이 지어질 때는 약간 도심 외곽지였지만 지금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거의 도심지 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 관련한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 배출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돼서는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배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 부분을 이전을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또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수수료 수익금에 대해서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집적시켜 놓은 것은 차제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이전을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적립해 놓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한 소방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보금을 놔두는 게 맞아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지금 건물도 많이 협소해서 시험이나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수장비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용인에 있는 부분도 소규모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새로운, 지금 현재 오송 쪽에 자리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송 쪽에 이전을 해서 좀 더 규모성 있게

해서 늘어나고 있는 소방의 검·인증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부대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일단 적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참고로 하나만 더 보고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소방청차장 이영팔** 수수료와 관련한 사항들은 일선에서 지금 소방용품을 제작·생산하시는 분들이 이게 적정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적정한 성능이 나오는지를 대부분은 다 소방산업기술원에 와서 검증이나 시험 성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을 때 이런 걸 시험하기 위해서 특수한 장비라든지 특수한 물질이 들어가서 수수료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라는 일선에 있는 제작업체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방용품 법정 인증수수료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수수료 부분을 좀 더 조정을 하여서, 이 수수료의 근간이 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이 고시를 개정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소방청에서 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부대의견에 넣어서 수수료의 적정성, 연구 검토 중이라니까 적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심의를 하니까 작은 것들에, 7·8번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될 일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소방청이 염두에 두시고 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청에 관한 2023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소위원회가 논의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진화위가 한 건밖에 없어서 진화위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위 빨리 입장해 주세요.

다음은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장내를 정돈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상훈** 진화위에서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훈 상임위원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결산 관련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부진 주의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보조금 교부 지연과 자치단체의 사전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17개소 중 4개소에서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7개소만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상훈** 수용 입장이고, 지적하신 것 반영해서 이월된 금액 올해 대부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4개소에서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주요 이유가 뭡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상훈** 일단 초반기여 가지고 시작이 좀 늦었고요.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 토지 사용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 허가가 행정적으로 약간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착오로 계속적으로 이월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겁니다.

○**모경종 위원** 방금 100%라고 직접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상훈** 100%는 아니고 대부분, 올해는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대부분 집행한 상황입니다.

○**모경종 위원**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적사항이 1건이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위원회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찰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이호영 경찰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호영 차장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저희 경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경찰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잘된 부분은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미흡하고 부

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배석하신 실무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명확히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소관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경찰청 소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은 세입 1건, 세출 13건으로 총 14건이고 부대의견이 1건 있습니다.

1번, 과태료·가산금 수납률 개선 필요입니다.

과태료의 2023년도 징수결정액은 2조 2934억 9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284억 36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53.6%입니다. 가산금 수납액은 322억 91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3.3%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연례적으로 과태료의 수납이 저조하고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매년 50% 내외이고 미수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2023년 미수납액은 1조 609억 8600만 원에 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과태료·가산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합니다. 미수납액이 누적된 것으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의견을 덧붙이면 수납률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납액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느끼시고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과태료나 가산금 수납률 이게 저조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계속 돼 왔던 거지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예.

○**채현일 위원** 그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지속 상태인가요, 더 악화되고 있는 건가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0년간 보면 납부율이 조금씩 상승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까지……

○**채현일 위원** 근원적인 해법이나 이런 건 없나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저희들이 가상자산 앱류라든가 자산관리가 일정한 금액이, 150만 원이나 200만 원이 넘으면 위탁한다든지 예금 앱류, 차량 앱류까지 계속 방법을 강구하면서 수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크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권 위원** 이거 나중에 발생 건수 대비 수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산금, 증가산금 이렇게 죽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 통계 한번 나중에 제 의원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에 73% 납부율이었는데 2023년, 작년도에는 84%까지 올라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국민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부적정하게 부과되고 있거나?

○**경찰청차장 이호영**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미납률이, 자동차는 무인단속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좀 소홀히 생각하기도 하고 해서 납부율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아, 단속을 너무 많이 하는……

○**소위원장 위성곤** 예.

○**경찰청차장 이호영** 현재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나 사망사고를 많이 줄인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무인단속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련된 내용은 더더욱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도 관련된 사건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세출 연번 1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매단가 현실화를 통한 노후차량 교체 적기 이행 필요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사업은 순찰차량 교체와 기능별 차량 교체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2021년 이후 차량 가격의 상승에 비해 예산상 구매단가 상승이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계획 대비 구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찰차량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업무 수행상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찰청은 노후차량 교체 기준이 경과한 경찰차량의 교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년도 예산부터 구매단가를 현실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기재부와 협의해 2025년 예산안에 순찰차 단가를 제조사 견적가의 22년 기준 95% 수준까지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충분한 예산 확보와 구매계획 준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2번, 저위험권총 보급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입니다.

장비관리유지 사업 중 권총 구매의 경우 경찰청은 저위험 권총 900정을 구입하기 위해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과 같이 38구경 권총 1411정을 구매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저위험권총의 성능 보완이 자연됨에 따라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과 38구경 권총을 구매한 것은 저위험권총 우선구매를 위해 기존 38구경 권총 구매예산을 삭감하였던 국회의 예산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저위험권총 보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초기 구매와 관련한 예산 집행이 본래 예산의 목적과 취지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이며, 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주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저위험권총의 보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도입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주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연번 3번,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품질 보완 및 국산장비 사용 활성화 필요입니다.

한국형 전자충격기 및 카트리지 구입의 경우 2022년도 예산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선금금 29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7억 6100만 원이 2023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나 최종 생산품의 납품검사 미통과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선금금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경찰청은 현재 외국에서 도입한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회는 2023년 예산안 심사 시 경찰청은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충분한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구매하되 미통과 시 기존과 같이 테이저건을 구매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2016년부터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전자충격기를 개발하였으나 최종 납품검사 미통과로 도입이 중단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향후 일선 경찰관들이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할 때 효능과 안전성 모두를 충분히 검증한 후 구매 및 현장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의할 것, 경찰청은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연구성과가 매몰되지 않고 국산장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주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해장비 개발·보급 시 효능과 안전성 검증에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국산 전자충격기 개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4번, 부적정한 예산 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경찰청은 범죄예측분석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고 이를 청년인턴 인건비 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부적정한 면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2년도에 동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편성되지 않은 바가 있어 2023년도에 동 예산이 미편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22년 말 112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범죄 예측분석시스템 용역을 포함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향후 예산을 부적정하게 전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이호영 주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주의보다는 좀 더 강한 시정요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모경종 위원님께서는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으로 할까요?

○이성권 위원 경찰청에서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주의 정도로 하고 가시지요.

모경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차장님, 담당자에게 주의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담당자는 안하고 싶었을 텐데. 그 위의 국장이 하라고 한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경찰청차장 이호영 저희들은 국장부터 해서 관리 감독부터 담당 교육까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금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나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금년 예산도 작년도와 같이 1억 9000만 원으로 했는데 전액……

○채현일 위원 범죄예측분석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또 편성됐나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예.

○채현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 예산도 다시 조정하실 거예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내년도 똑같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전액 미집행을 했잖아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전액 미집행이 아니고요, 1억 9000만 원 중에서 원래 1억 3000씩 죽 유지보수비를 계상해 왔는데 담당자가 1억 3000으로 먼저 계약을 하는 바람에 6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6000만 원 남은 것을 그때 청년인턴 인건비를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자체 사용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사용해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담당자 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주의를 수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주의로……

○**경찰청차장 이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연번 5번입니다.

112지능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입니다.

112지능화 사업은 112시스템의 노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체와 112신고포털 구축 및 112긴급신고앱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도에 사업 일정 지연으로 2023년도에는 해외 제조 장비 구매 절차 지연 등으로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일정 지연이 발생하였고 사업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사업 심의위원회를 4월보다 앞서 개최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사업의 지역 가능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심의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12시스템 사업의 소요 기간과 난이도를 감안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112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경찰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접점인데 이런 중요한 장비에 대해서 내부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지연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제조, 이건 전부 다 해외에서 제조하는 겁니까, 장비를? 아니면 일부 국산, 일부 해외 이렇습니까?

○**경찰청차장 이호영** 제가 알기에는 일부 국산 아니면 일부 해외인 걸로 아는데요. 이게 장비 자체가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차원이고 같은 사업을 죽 했다기보다는 2020년도에는 유선 장비, 2023년도에는 네트워크 장비 이런 식으로 됐는데 계약이 늦어져서 이렇게 이월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월 발생한 건 금년도에 다 마무리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런 건 좀 빨리해야 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예.

○**이상식 위원**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기영** 6번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관련 이·불용 최소화 및 미반영 장비구매 지양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관련 예산 편성 당시 구매단가 대비 집행단가 차이로 인해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한 구매 수량보다 많이 구매하거나 구매계획에 없었던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우편요금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무인단속장비 설치 증가에 따라 단속 건수 증가 및 과태료 발송고지서 증가를 예상하고 전년 대비 4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약 100억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경찰청은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않았던 장비구매는 지양하는 등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경찰청차장 이호영** 주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관련해서 입찰 경쟁으로 구매단가가 하락하여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으로 과속 장비를 구매하였으나 평균 구매단가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우편요금 불용입니다. 2025년 우편료 예산을 단속 건수 감소 추세와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추세 등을 반영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연번 7번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시에도 동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 일회적인 인센티브로는 장기적으로 운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경찰청은 동 사업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금액의 상향을 검토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통약자 대체교통수단 지원사업 주관부처와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검토할 것이며,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합니다. 실제 차량 운전자의 면허반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돈 가지고는 되지는 않고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실제 초기 치매 환자들까지도 차량을 운전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대대적으로 홍보들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자진반납 운동이 좀 될 수 있게끔 함께 시민운동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8번입니다.

교통안전 평가지표 개선 및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입니다.

지역별 교통안전지표 조사·측정 사업은 각 지역 교통 관련 현황조사 및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75%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안전지표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고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지표 평가를 공표하는 등의 제도화와 공식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교통안전지표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교통안전도 평가·환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22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9번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실적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의 경우 실물 운전면허증 대비 사용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발급 유인이 적고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발급 목표치를 과다 계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발급실적을 보면 286만 6179장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43.9%만 발급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발급 유인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발급 유인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차장님 모바일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저는 아직 없습니다.

○모경종 위원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부터 없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홍보 노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모바일 면허 등록하려면 경찰서를 찾아가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차장님?

○모경종 위원 찾아가야 된답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시면.....

○소위원장 위성곤 저도 해 보려고 했더니 거기까지 찾아가라니까, 시험장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불편해서.....

○경찰청차장 이호영 휴대폰으로 다운받아야.....

○소위원장 위성곤 예, 그러니까 등록하는 것은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이쪽에서 할 수 있게끔.

일반 면허증 분실하면 동사무소 가서 해도 되지요? 안 됩니까?

○경찰청차장 이호영 안 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안 됩니까?

○경찰청차장 이호영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것도 저리 가야 돼요, 운전면허증?

○경찰청차장 이호영 예,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가서.....

○소위원장 위성곤 배석하신 보좌진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하시는군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아니, 동사무소에서는 안 되지 않나요?

○소위원장 위성곤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아, 현재는 안 되지만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소위원장 위성곤 예, 개선을 좀 해서.....

○경찰청차장 이호영 그것은 행정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행정부처랑 협의해서.

○모경종 위원 참고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런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급받는 데. 불편한데 제도개선해서 편하게 발급받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것 어려우면 지·파출소라도, 읍면동사무소가 어려우면 지·파출소

라도 하게 한다면…… 아, 그 업무가 많아져서 또 지·파출소 직원들이 뭐라 하겠네.

○경찰청차장 이호영 저희들이 많이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예.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10번, 민간경호서비스 지원사업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민간경호서비스 지원사업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 한시적이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므로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민간경호서비스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동 사업의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합니다.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11번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의경대체 지원사업은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폐지에 따른 대체 경찰관 충원 및 인력 부족을 보완할 장비 등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 698억 2100만 원 중 667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36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급식비 3억 9200만 원, 유류비 5억 3400만 원, 해안경비 임무수행 내역사업의 관리용역비 14억 600만 원 등입니다.

기동대 창설 지역, 가스 및 전기보일러 사용 청사의 확대 등 급식비 및 유류비 수요가 감소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예산 편성이 과대 편성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해안경계 임무수행 내역사업의 경우 유지보수 용역계약 지역 등으로 관리용역비가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급식비 및 유류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추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 해안경계과학화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이며, 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주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올해 기동대 창설이 완료되어 현재 급식비는 정상 집행 중이고 유류비는 2023년 결산을 반영하여 2025년 정부안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해안경계 임무수행 관리용역비는 유지보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미리 체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12번 해외 파견자 적정 수요 산정 및 전지의료검진제도 지원 개선 필요입니다.

직무파견 경찰주재관 운영비 중 주택임차료의 경우 당초 4개 공관 파견 인력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개 공관으로 파견 수요가 줄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지원비 및 정착지원금 등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지의료검진비는 의료 수준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해외 파견자 및 동반가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항공료 등 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실제 검진이 불가하여 예산 2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해외 경찰주재관 등 운영비 예산 편성 시 해외 파견자 수요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경찰청은 전지의료검진비 예산 편성 시 외교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등 관련 여비를 같이 편성하여 해외 파견자 및 동반가족의 실질적인 전지의료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며,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해외 경찰주재관 등 운영비 집행률 향상을 위해 파견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검진 여비를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제도개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서기영 13번 국제경찰장회의 회원국 간 순환 개최 등 개선 노력 필요입니다.

경찰청은 국제경찰장회의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만 4회 개최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 인터폴 총회, 유엔 경찰장회의 등 현존 국제회의 및 국제치안협의체와 차별화되고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경찰장회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찰청은 우리나라에서만 개최하고 있는 국제경찰장회의가 회원국들 사이의 현안을 의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협력이 이루어지는 다자간 국제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순환 개최되는 회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합니다. 장기적으로 참가국 경찰기관들과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순환 개최 회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35개국, 작년에 온 나라가 전부 다 5대양 6대주에 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적으로 모여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이호영 여러 가지로 많이 흘어져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많이 흘어져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이호영 예.

○이상식 위원 제 생각에 이걸 좀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빈번한 동남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외교부 보면 우리나라 플러스 아프리카 나라들 다 이렇게 하는 회의가 있잖아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예.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플러스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조금 범위를 좁히되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1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부대의견입니다.

최근 경찰청 특진 인원이 확대되면서 그 기준과 심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진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2023년 총 승진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한 특진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현장동력 확보 및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공직 우수자를 적극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특진이 늘어나면서 일부 관련 부정적 사례가 발생한 내외부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특별한 공적에 대한 포상이라는 특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계급이 열한 계급인데 일반공무원은 9개 계급입니다. 두 단계가 많은데요. 계급 구간에 대한 단축과 그리고 또한 승진시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계급 구간이 많다 보니까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업무가 다른 경찰관들에게 이전되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고 싶은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찰청차장 이호영 우리가 일반직보다 한두 단계가 더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을 그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저도 부대의견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장관님께 경찰·소방 포함해서 경찰관들의 근속 소요 연한 단축에 대해서 장관님한테 질의를 제가 했고 장관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기회로 해 가지고 한번 경찰에서도 직협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알겠습니다. 현장 의견 잘 검토하고요. 근속 승진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요. 장관님께서 예산 관련 문제도 협의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차제에 한번 해 보십시오.

○**경찰청차장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소위원회가 논의한 시정 요구와 부대의견을 참고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죽 해서, 38건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38건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한 2시간가량 정도 걸릴 것 같은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진행을 하고, 선관위하고 나서 잠깐 정회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입니다.

먼저 국정 심의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위원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말씀을 드리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은 총 7건이고 부대의견이 2건입니

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연번 1번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입니다.

당선 무효된 공직선거후보자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등으로 구성된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실적이 27.5%로 저조한바 적극적 징수위탁 및 시효관리 등 징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미반환 선거보전비용 징수를 위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징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윤건영 위원님께서 주의, 그다음에 이광희·이상식·이성권·위성곤·한병도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선관위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전부 수용한다는 말은 주의로 수용한다는 말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주의, 제도개선 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앞서 2개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제도개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연번 1번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사업 예산의 적정규모 편성 노력 필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을 과대 계상하여 불용한 측면이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별 삭제요청 건수 및 1인당 평균 삭제요청 건수의 편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2건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예산을 과대 계상하여 불용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것과 둘째, 지역별 단속 실적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시도별 배정된 인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첫 번째 사항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선관위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전부 수용합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수용하라면……

○ 이상식 위원 전부 수용한다고 하니 한 단계 낮춰서 제도개선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 전문위원 조문상 4쪽입니다.

연번 두 번째 사업입니다.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23회계연도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은 4억 8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위탁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납부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된 집행액은 340억 240만 원으로 실제 집행액의 1.4%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위탁선거관리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향후 위탁선거경비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에 포함되도록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둘째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위탁선거경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 시정과 제도개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2개 시정요구사항이 좀 상충됩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는 위탁선거관리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라는 취지이고 두 번째는 현재와 같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의견을 들으신 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일부 수용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및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는 세입세출예산 내로 편입하는 것이고 하나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정요구사항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는 위탁선거경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예, 설명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먼저 국가재정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선거경비는 사전에 적정규모의 경비를 편성하기 어렵고 또 2개 회계연도에 걸쳐서 집행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인 농·수·축 협회에서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위탁선거에 따르는 경비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내에 편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 내에 편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수입대체경비 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여권 발급 수수료나 시험응시 수수료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위탁선거경비는 선거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지 선관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용역이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대체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탁선거경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4월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선거경비 집행 내역을 위탁단체에 통보를 하고 위탁단체 구성원들에게 공개를 해서 위탁선거경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해식 의원님, 임호선 의원님, 전봉민 의원님, 세 분께서 위탁선거경비의 예산 외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철회를 할게요.

시정요구사항에서 한 가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재정에 포함되도록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광희 위원님 계신데, 시정요구하고 계신데 좀……

○**이광희 위원** 지금 이 상태로 되지 않으면 문제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어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놓후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예, 위탁선거법에 예산 외 운용 근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법률을 최대한 빨리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앞선 것은 시정사항에서 빼는 걸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ODA예산 관련돼서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연번 3번 ODA예산 시간계획 조정 및 사업보완 필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당초 15개국 45명에 대해 실시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0개국

33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전체 예산의 63.6%만 집행하였고, 온라인 강의 시 영어음성 제공 및 비영어권 자막 제공 요청과 비영어권 참석자의 경우 해당 언어 통역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참가국 모집 등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언어소통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보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윤건영 위원님께서는 주의, 이해식·위성곤·한병도 위원님께서는 제도 개선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주의도 수용하고 제도개선도 수용한다는 말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소위원장 위성곤** 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그러면 주의 및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예정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지금 저희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 외국 선거 관계자를 초청해서 선거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국이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불참을 통보하는 경우에 대체 국가를 물색해야 되는데 그 대체 국가 물색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서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 비영어권 참석자들의 경우 언어소통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비영어권 언어 자막을 제공한다든지 영어로 순차 통역을 제공해서 비영어권 참석자들이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AI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6쪽입니다.

연번 4번 세목별 예산사용 지침 준수 필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선거안내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케이블, 전화선 등에 대한 비용을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세목별 예산 사용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7쪽입니다.

연번 5번 국외출장 내실화 제고 필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23년에 실시한 외국선거 참관 방문국가와 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주요 일정, 방문단 구성을 살펴보면 해당 국외출장이 외국 선거참관 및 기관교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제고하고 방문국 및 방문일정을 보다 충실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제도개선」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요? 주의 아니야? 5번 아니에요? 5번 주의인데 왜……

○전문위원 조문상 제도개선으로 위원님께서 수정하셨는데 아마 반영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 저만 주의로 되어 있구나.

○전문위원 조문상 어제 저녁에 수정을 하셔 가지고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8쪽, 마지막입니다.

연번 6번 안건검토수당 지급 기준의 합리성 제고 필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대체하여 안건검토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 별도의 용역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안건 숫자에 따라 일괄적으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안건검토수당의 지급 기준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위성곤 위원님께서 시정, 이성권·이해식·한병도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일부 수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24년도에 규칙을 개정해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위성곤 저만 말하면 돼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이어서 마지막, 9쪽에 부대의견이 2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 부대의견이 있어요?

○전문위원 조문상 예, 9쪽입니다.

2건의 부대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신정훈 위원장님과 이해식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발생하는 법률 위반행위를 현저히 낮출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시행한다라는 의견을 배준영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2건 다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추가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저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회를 구축한다든가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을 포함시켜서 부대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소위원회가 논의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위성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평소 인사혁신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

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인사혁신처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6건, 공무원연금기금 3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응시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는 수수료 수입의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응시수수료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과 우수한 인재의 공직 임용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각각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모두 수용합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하위 실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혁신과 더불어 수험생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추가 의견 없습니다. 제도개선이면 충분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2쪽입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연번 1번,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동일건 분할 집행 지양 필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629만 원의 지출 건을 각각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을 우회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위성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께서는 주의, 한병도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인사혁신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도 한도 내에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경종 위원 분할하여 지급된 이유가 뭡니까?

○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그때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요. 23년 5월 심각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방역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초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불가피성을 인정하면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 전문위원 조문상 3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개방형 직위의 수가 102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하였고, 하단 부분 보면 개방형 직위 임용 실적은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는바 개방형 직위의 수가 감소하면서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첫째, 개방형 직위 채용수요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과 둘째, 개방형 직위의 자율 직위로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보면 첫 번째 것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고 두 번째 것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25년도 예산안은 이미 개방형 직위 조정 현황 등을 반영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의해서 예산을 면밀하게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개방형 직위가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직위 중심으로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주세요.

○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수용합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지금 시정을 수용하십니까?

○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그러니까 적정 예산 편성은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 소위원장 위성곤 두 가지를 나누어서 그 조항 중에……

○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첫 번째, 개방형 직위 채용 수요 감소 등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은 주의를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은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 이상식 위원 저는 공직사회의 폐쇄성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고 개방성·투명성·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게 예산이 불용된 것, 이것을 저는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개방형 직위 자체가 줄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마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걸 조금……

○소위원장 위성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것……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뒤를 바꿔서……

○이상식 위원 저도 주의로 하겠습니다, 주의로.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해서 주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두 번째 시정요구……

○소위원장 위성곤 첫 번째.

○이상식 위원 첫 번째, 시정을 주의로.

그러니까 불용액 이런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개방형 직위 자체를 늘리는……

○전문위원 조문상 ‘확대할 것’하고 주의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식 위원 예, ‘확대할 것’으로 의견을 해서……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저희는 사실 개방형 직위 자체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민간 인재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내실화하고 민간 인재를 채용할, 더 우수한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빠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것, 두 번째는 우수 인재 채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더 궁극적인 목적이 우수 외부인재를 채용하는 것이지요, 좀 더 높은 가치가?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라고 해주시면……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요. 그건 다른 거지요.

이렇게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라는 것은 개방형 직위의 숫자를 늘리라는 말이고, 거기 에 고급 인재를 쓸 수 있게끔 하라는 말은 또 다른 제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 두 가지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그건 개방형 직위 수를 일방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수 인재가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방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개방형 직위를 감소시키면서 또 동시에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더 이렇게…… 어떻게 갈 생각입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그러니까 직위를 감소시키는 걸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원장 위성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선관위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지면서……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인사혁신처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인사혁신처구나.

어떻든 간에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그러니까 말씀 주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면서 개방형 직위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셔서……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아니, 개방형 직위를 줄이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상식 위원** 줄이는 건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줄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인력은 많은데 우수 인재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불식시키면서 민간의 우수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 자체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개방형 민간 인재가 들어왔을 때 연봉 상한을 폐지한다든지 그다음에 평가를 자주 해서 연봉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수 인재가 들어와 가지고 공직에 와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상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 건 나중에 보고를 한번 정식으로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정책적인 내용?

○**소위원장 위성곤** 그건 보고는 보고대로 받으시고요. 우리는 의결을 해야 되니까……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2023년도 전년 대비……

○**소위원장 위성곤** 전문위원님.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2023년도 전년 대비 개방형 직위 수가 102개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확대하는 게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거라고 위원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23년도에 개방형 직위가 감소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지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충돌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데……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개방형 직위 숫자, 양적 확대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실은 항상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언론에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렇게 내실 있게 조정해 나가면서 그런 말은 쏙 들어가고 진짜 우수 인재를 채용해 달라 그다음에 개방형 인재뿐만 아니고 다른 민경채 같은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다 종합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여전히 두 가지인데요, 저는 개방형 직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을 그렇게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수 인재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그건 그렇게 하시고 첫 번째 것은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개방형 직위를……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 말씀은 개방형 직위를 줄이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되겠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공직에 더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우수한 민간 인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저도 제도개선으로 낮추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조문상 그러면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거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것’하고 제도개선으로 하고, 두 번째 것은 그대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위성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4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국외훈련비 환수 기준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현재 학자금의 2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유럽 국가 등 무상교육이 실시되거나 학비가 저렴한 국가의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영어권 국가 파견 비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영어권 국가로의 파견 집중 현상은 국외 교육훈련의 다변화 및 비영어권 전문가 양성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환수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할 것과 둘째, 국외 교육훈련의 다변화 및 비영어권 전문가 양성 확대를 고려하는 한편 전략적 협력 국가 및 사업 중심으로 비영어권 국가 파견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두 가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그러면 두 가지 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다음, 5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23년 신임관리자과정에서 편성된 예산 중 2억 3700만 원을 국가인재원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계상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용하였는데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을 예산 편성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주의 의견 수용합니다. 향후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서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주의를 수용한다고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소위원장 위성곤 저는 200만 원밖에 불용을 안 해서 제도개선 해 드리려고 했는데

수용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입니다. 연번 5번 국제부담금 비관서운영경비로의 지급 필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부담금을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국제부담금을 비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위성곤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께서는 시정,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앞으로 국제부담금을 관서운영경비가 아닌 일반지출로 집행하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시정을 받아들이는 걸로?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다음, 7쪽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연금기여금 세입 항목 중 급여환수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고 장기 미수납 급여환수채권도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과 함께 미수납 급여환수채권에 대한 조기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 미수납 급여환수채권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앞으로 장기 미납 급여환수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8쪽입니다. 연번 2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퇴직급여·퇴직수당 사업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퇴직 인원 추계 방식을 개선하여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매년 예산 편성 시점에 전망한 다음 연도 물가인상률, 퇴직자 수

등이 실제 급여 지급을 할 때 차이가 발생돼서 불가피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재직자의 연령별 구성, 직종별·재직기간별 퇴직자 변동 추세,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의 의견 수용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주의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마지막 9쪽입니다. 2학기 대부 수요 추계 시 최근 3년치 실적 반영 등 추계 방식의 변경 검토 필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대여학자금은 당초 계획액 3164억 9100만 원을 계획 변경하여 787 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실제로 대부 수요 감소로 인해 지출액 감소로 184억 원을 불용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은 2학기 대부 수요를 추계함에 있어서 최근 3년치의 실적을 반영하는 등 추계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위성곤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께서는 주의, 그다음에 이광희, 한병도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말씀 주신 대로 최근 3년치의 실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마무리하기 전에 부대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을 했는데요. 올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개정하고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 현장에서 9급 공무원들을 만나 보면 저희 서귀포 지역인 경우 서귀포시의 공무원이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계시다가 그만두시고 무기계약직을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또 8급을 하다가 미화원에 응시하고 미화원이 된 친구도 만났고요. 왜 그랬냐 물었더니 처우가 가장 불만이다. 그런 불만들이 실제 통계로 많이 잡히고 있어서요.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조항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싶은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달희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공무원 급여를 높이는 것은 국민 정서가 또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9급 공무원이 실제로 받아 가는 게 백육십몇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아 가는 게. 그러면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지 여론조사나 이런 조사 해 본 게 있으면…… 심리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공직사회에, 특히 9급 공무원처럼 이렇게 그냥 뉴스에만 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일반 국민 인식도 조사는 안 했지만 저희가 9급 공무원이라든지 7급 공무원의 1호봉 이런 분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고 앞으로 퇴직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 뭔가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리얼 잡 프리뷰(Real Job Preview)라고 해 가지고 모든 사실을 그대로 알려 주고, 책자로 발간해서 그런 것을 소상히 알려 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것은 공무원 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우리가 수행하려면 하급 공무원들의 급여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 그러면 국민들께서 여기에 동의하면 우리가 쉽게 국회에서도 함께 올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 인식 조사를 한번 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100인 이상 대기업 평균보다 저희 공무원 급여가 더 높고요, 평균 급여는. 그런데 상위직과 하위직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어서 상위직과 하위직의 그 급여 차이를 좀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소위원회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의 시정요구나 부대의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안의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결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국회 공무원, 국회 보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심사는 내일 오전 9시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상욱 모경종 위성곤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채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하종목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

경찰청

차장 이호영

소방청

차장 이영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상훈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지원과장 박래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